

# 오늘 임시국회 문 열리지만... 여야, 찬바람 쌩쌩

## '쌍특검'·'3대 국조' 놓고 대치 내년 예산안 20일 처리 미지수 총선 선거제 개편 협상도 험로

12월 임시국회가 11일 개회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쌍특검법' 도입과 '3대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정 처리 시한(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도 넘기며 극장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결과다.

하지만, 분야별 증액과 감액을 두고 견제자가 커서 이마저도 지켜질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며 이재명 대표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점에 총지출액에서 순증액되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액된 범위 내에서만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책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안에서 증액된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R&D(연구·개발), 세만금 예산 등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특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버리고 있어서 예산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속칭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는 12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뇌관이다.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 정국을 앞두고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여권에 상충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세 카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의도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을 풀기 힘든 구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심사 기간 180일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

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해병대 체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은 20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는 28일 전까지 야당과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여야의 대치 전선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및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도 확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상관인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방송장악 선전포고'이

며,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강 후보자를 장관 후보로 삼은 것은 국민을 대놓고 무시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공백이 된 방통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해 공영방송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과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협상도 간단치 않다. 국회의 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어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여당 편향적이라며 재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제의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최고위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총선 브리핑

## 문금주 전 전남도부지사 "지방 소멸 적극 대응"

### '고흥·보성·장흥·강진' 출마

29년간 공직 생활을 통해 행정 관료로서 임지를 다진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저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내고 출판기념회를 연 뒤 총선을 준비한다.

문 전 부지사는 10일 오후 3시 보성 다향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책에는 문 전 부지사가 29년간 공직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 등을 바탕으로 한 정치 신념, 정치 신인으로서의 포부를 밝힌 계획이다. 그의 유년시절부터 행정고시 합격, 공직 생활, 새로운 시작 등 이야기를 담았다.



내년 총선 고흥·보성·장흥·강진에 출마를 공식화한 문 전 부지사는 지난 7월 전남도에서 명예퇴직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문 전 부지사는 "길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며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성 출신인 문 전 부지사는 광주 북성중, 서석고, 조선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4년 행정고시 합격 후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김해나 기자 khn@

##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 "농업 육성은 의무"

### '고흥·보성·장흥·강진' 출마

내년 총선 고흥·보성·장흥·강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행보를 가속화했다.

최 전 청장은 지난 9일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책 '최영호가 바꾸겠습니다'를 내고 기념 행사를 했다.

책에는 도농간 소득 격차 해소 방안, 지역 균형에 맞는 농가 발전 방안 등을 담았다.

최 전 청장은 "국가가 농업·농촌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면서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농어촌기본소득 도입과 최저



농산물 가격 보장,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제2 토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량자급률을 OECD 국가 평균인 7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농업 정책의 틀을 바꾸고, 비소득 작물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농민의 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안을 마련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청장은 한곡전력공사 상임고문을 지내고 지난 8월 고향인 보성이 있는 고흥·보성·강진·장흥 지역에 출마표를 던졌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9·19 합의 파기로 한반도 군사적 오판 위험 커져"

### 중립국감독위 스웨덴·스위스 대표... "JSA 내 북한군 활동 활발"

6·25 전쟁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이하 중감위)가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오판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중감위의 스웨덴 대표인 레나 페르손 헤르리츠 소장과 스위스 대표인 이보 베제너 소장은 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바로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캠프 보니파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2018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북한은 사실상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작업에 들어갔고, 우리 정부도 파괴·철수 GP의 복원을 공언했다.

헤르리츠 소장은 "군사합의의 목적은 (6·25전쟁이 끝나고 체결된) 정전협정을 진전시키는 것이었

다"며 "당연히 완충지대가 없으면 위험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칙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며, 양측이 그 규칙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JSA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은 권총으로 무장하기 시작했다. 권총 휴대는 군사합의 중 'JSA 무무장화' 조항 위반이다.

베제너 소장은 "2주 전부터 (북한) 군인이 많아졌다"며 JSA 내 북한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 개발부지 매매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매매금액	<b>720억</b>
대지면적	<b>66,773㎡ (20,198평)</b>
연면적	<b>33,730㎡ (10,203평)</b>
용도지역	<b>일반공업지역</b>

- 한전 수전 사전검토 100MW 검토 완료로 데이터센터부지로 활용 가능
-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전기, 수도 등 첨단신산업 중심 유치로 연계사업, 연구 등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 전국 항만 누적 물동량 41%에 달하는 부산항, 마산항, 감천항 인근에 위치한 자산
- 현 매각 토지 약 2만여평으로 1만평으로 분할 매입 협의 가능

대표 번호 **02-554-9685**  
**010-4484-8110**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영업소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